

## 이차전지 순환이용 활성화... 지원단 운영

- 환경부,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및 산업계 지원 강화 위한 별도조직 신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30일부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기 관점에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핵심 광물·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우리나라도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 제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 내에 별도의 전담 조직이 신설된 것이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지난 7월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를 담당한다.

지원단은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리튬인산철 배터리(LFP) 재활용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핵심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폐전기·전자제품, 태양광패널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미래 폐자원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겸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장은 “전 세계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을 펼침에 따라 이차전지의 원료로써 천연 광물보다 재생원료가 더욱 대접을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며,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기본 바탕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적극 지원하여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핵심광물·소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감안할 때 공급망 다각화 및 내재화 시급
    - 또한, EU 등 해외 주요국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사용후 배터리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이에, 우리나라도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기 관점에서 관리 및 산업계 지원 강화 필요
    - 아울러, 폐전기·전자제품, 태양광 폐패널 등 유관 분야와 연계관리 강화
- ⇒ 확장된 업무 수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 필요

**□ 조직 구성(안)**

- (명칭)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 (기간) 설치 후 6개월(필요시 6개월 연장)
- (구성) 자원순환국장 직속으로 기구를 신설하며, 4급 단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4급 1명, 4·5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3명)
  - 총괄·제도팀, 산업지원팀, 미래폐자원팀(총 3개 팀)으로 운영
- 주요업무
  - (총괄·제도팀) 지원단 운영 총괄, 미래폐자원 R&D 총괄, 관계부처 협의·조정, 법령\* 정비 대응, LFP 배터리 자원순환 방안 마련 등
  - (산업지원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이차전지 부산물 등 재활용방안,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등
  - (미래폐자원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배터리 이력관리, 태양광폐패널 등 미래폐자원 관리체계 구축